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정 윤 찬 (前 국무총리 · 서울대학교 총장,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1. 한국경제의 지난 반세기: 어제와 오늘의 명과 암

지난 50 여 년 동안 한국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경제성장을 처음 시작하던 1960년대 초의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실내 체육관 하나 우리 손으로 지을 역량도 없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은 인구 5천 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 3만 달러 수준을 상회하거나 그에 근접한 7개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우리 앞에 있는 여섯 나라들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이다¹⁾. 불과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아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하다. 대단한 성취이자 우리 경제의 밝은 면이다.

반면에, 오늘날 한국경제는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다. 이 두 가지 어두운 면은 점차 나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8.6%, 90년대에는 6.7%던 이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하락하더니 2010년대에는 2~3%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었다. 외환위기 직전이던 1997년 0.27이던 지니계수가 지금은 0.35를 넘어섰다. 삼성·현대·LG·SK 등 4대 재벌의 연간 매출액이 경상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 의존도가 커졌다. 이 값은 1980년대 초에는 20%였고 10년 전만해도 40%였다. 경제적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²⁾. 한국을

1) 이들 6개국을 ‘30-50클럽’이라 부른다. 이미 인구 5천 만 명을 넘어선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또는 내년 중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내용 및 통계에 대해서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현대경제연구원, “2015년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제전망,” 『경제주평』, 통권 610호, 2014.10)를, 30-50클럽 진입의 의의에 대해서는 박종규(“30-50 클럽” 진입 전망과 의미, 『주간 금융브리프』, 23권 38호, 2014.10.18-24, pp.3-9)를 각각 참조하라.

상징하는 표현으로 역동적 한국(Dynamic Korea)을 사용했던 것이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 이대로 놔두면 경제가 쇠약해짐은 물론이요 언젠가는 사회 전체가 결속력을 잃고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게 될까봐 심히 걱정된다.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개인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규제는 투자의 주요 걸림돌이 아닐 뿐 아니라 가계소득은 증가를 유도하기도 힘들고, 지금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가계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소비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책은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경제 전체적인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부양에 대한 강한 집착을 떨치지 못하는 것 같다. 게다가 성공한다 해도 그것은 단기적인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가계부채의 규모를 억제하고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근본적인 과제, 즉 지금 당장이 아닌 우리경제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원모심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경제,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나? 밝은 면은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면은 덜 어둡게 해야 한다.

1) 한국경제의 밝은 면: 교육열과 도전정신

밝은 면을 더 밝게 하자는 것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우리 경제의 밝은 면 즉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가 크게 성장했던 것을 가능케 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첫째, 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가 핵심적이었다. 이렇다 할 천연자원은 물론 축적된 물적자본도 없었던 한국으로서는 경제성장을 노동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력의 자질이 높지 않으면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없었다. 우리 국민들은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이든 했었고, 미처 생활의 여유가 생기기도 전에 무엇보다 먼저 자녀들의 교육에 매달렸다.

한석봉의 일화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교육열은 매우 오랜 전통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30-50 클럽의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된 것도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이 한석봉의 어머니에 못지않게 자식을 키우는 데 지극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열의가 모여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그 인재들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하면 된다’는 도전정신이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은 자신과 가족, 나아가 공동체를 빈곤에서 구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우리의 젊은 남녀들은 일자리가 있

2) 2013년 4월 15일자 문화일보 사설에 따르면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 McKinsey Global Institute 소장은 “한국경제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 개구리와 같다”고 했다. IMF 경제위기가 다가오던 1996년 말에서 1997년 초에도 한국경제를 두고 누군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돕스 소장이 이런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경제에 대해 쓴 소리를 했던 근거는 맥킨지 보고서(McKinsey Global Institute, “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April, 2013)라고 한다.

는 곳이라면 먼 타국도 마다하지 않고 갔다. 경험도 노하우도 없었지만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과감히 몸을 던져 도전했다. 영화 『국제시장』이 감동적으로 그려냈듯이 1960년대에 한국인들은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로 갔고, 이들의 성실과 근면에 감탄한 서독 정부는 과묵 한국인들의 월급을 담보로 상당한 액수의 개발차관을 제공했다.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던 시기에 처음으로 받았던 개발차관이였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에도 많은 건설 노동자들은 이 지역의 핵심 기반시설을 만들고 개발계획의 수립과 실현을 도왔다. 이들은 자신이 받은 임금을 고국으로 송금했으며, 그 덕분에 가족들은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과감한 도전정신과 높은 교육열은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존재했다. 함께 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결속력도 매우 강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과거의 도전정신은 점점 희미해져가기 시작했다. 가난했지만 대담한 기상이 있었는데, 가난을 벗어나자마자 부유해지기도 전에 유약해져 버렸다. 높은 교육열은 조금도 식지 않았지만 우리 교육이 시대에 걸 맞는 인재를 키워 내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낸 지 이미 오래됐다. 학생들의 심신은 더욱 더 지쳐가고 젊은이들의 정서는 더욱 더 메말라 가고 있다. 새파란 청춘들이지만 도전보다는 안정을 택한다. 지성적인 분석보다는 감성적 느낌이 거의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교육을 가지고는 한국경제를 더 밝게 만들 수 없다.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 좀 더 도전적이고 지성적인 인재들을 길러내야 한다. 공동체 정신을 다시금 일깨워 줄 사회혁신도 필요하다.

2) 한국경제의 어두운 면: 선성장·후분배 정책

한국경제의 어두운 면을 밝게 만들려면,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정책의 기본전략에 방향수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경제정책의 기본 전략은 선성장·후분배에 입각한 성장 우선주의였다. 수출이나 중화학공업 같은 특정 산업을 선도 부문의 먼저 육성하고, 여기에 호응하는 대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그 성과가 경제 전체에 파급되기를 기대하는 불균형 성장전략, 이른바 낙수효과 모델에 의존해왔던 것이다. 성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상 목표였고 분배와 형평은 부차적 고려사항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오늘날 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를 보는 관점과 경제를 대하는 자세도, 사고방식도, 정책의 내용도, 과거와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다.

물론 불균형 성장전략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건 아니다. 불균형 성장의 결과, 소수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가 고착화되었고, 국민 대다수의 고용과 소득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불공정 거래를 감수해야 하는 위치로 전략해 버렸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가계부문과 기업부

문이 각기 양극화를 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분배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회자되더니 최근에는 경제학자들이 ‘임금 없는 성장’의 문제를 경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다³⁾. 실질임금이 정체되어 가계소득이 제대로 늘어나지 못한 결과 가계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내수가 부진해져 중소기업들의 여건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되었다.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위험수위를 넘어, 2014년 말 현재 가계신용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의 138%인 1,089조원에 달했으며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자금순환표상의 가계부채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의 164.2%인 1295조원으로 늘어났다. 지금은 빚을 낸 사람도 빚을 준 금융기관도, 심지어 일반 국민들도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2015년에도 가계부채는 거침없이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 다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 내수가 줄어드니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타격이 크다. 쌓이는 재고로 이들의 투자는 부진하다. 수출 대기업의 뛰어난 성과도 경제전체의 활력 회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행된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정보화는 한국사회 특유의 갑을관계 문화와 겹쳐 국내의 산업간 연관관계를 단절시켰다. 수출과 내수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되었다.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국내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은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를 가져왔다. 이는 “양극화 심화 ⇒ 가계부채 증가 및 중소기업 부실 누적 ⇒ 내수 부진 ⇒ 성장 둔화 ⇒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한국경제에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의식수준은 지금까지도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선성장·후분배의 관성 또는 미망(迷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불공정한 분배 관행이 확립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교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존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극화의 개선 없이는 성장 둔화를 피할 길은 없다.

2. 단기적 성장전략: 동반성장

한국경제의 어두운 면을 덜 어둡게, 밝은 면을 더 밝게 하자는 문제의식에서 동반성장이 나왔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있는 사람으로부터 빼앗아 없는 이들에게 나누어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구조도 고치자는 것이다. 동반성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동반성장이야말로 한국경제가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3) ‘임금 없는 성장’에 대한 간결하지만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는, 박종규의 글(“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와 동반성장,” 동반성장연구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 심포지엄 <한국경제의 대외적 취약성과 정치사회적 불안: 분석과 대응>의 발제자료, 2014.4.10)을 참조하라.

동반성장이 자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다. ‘자본주의는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동반성장은 기업들의 이익 극대화에 저해되는 것이니 자본주의와 반대된다. 솔직히 말해 사회주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반론은 자본주의를 잘못 배운 결과이다. 이익추구를 위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것은 탐욕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참모습이 아니다.⁴⁾

한국의 자본주의는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목전(目前)의 이익 극대화를 통해 주가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기업 활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이는 주주만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는 근로자들도 있고 납품·협력업체들도 있으며 고객도 있다. 주주의 이익 뿐 아니라 이들의 이익이 모두 극대화되어야 그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근로자들과 납품·협력업체, 고객의 이익을 희생해 가면서 그 회사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단기간에 걸쳐 설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다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정도의 얇은 사고수준과 철학으로는 한 때의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를 이은 번영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고객과 근로자, 협력업체들 각각에게 합당한 성과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이다. 그것은 동반성장이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동반성장의 경제적 원리는 무엇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계적인 완전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성장하는 산업이 있으면 사양산업도 있기 마련이다. 모두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 문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지 않고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는 순환이라고 한다.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요체다.

4) 미국 제26대 대통령(1901~09) 루즈벨트(T. Roosevelt)는 캔자스주 오사와토미(Osawatomie)에서 남북전쟁 기념연설(1910.8.31)을 한 적이 있다. 그가 당시 인용한 다음과 같은 링컨(A. Lincoln)의 말은 자본주의의 참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동반성장이 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 깊은 울림을 준다. “노동은 자본보다 앞서는 것이며 자본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자본은 노동의 결실일 뿐이다. 노동이 먼저 존재하지 않았다면 자본은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다. 노동은 자본보다 우위에 있으며, 자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자본에게도 권리가 있다. 다른 어떤 권리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권리도 보호받을 만하다. ... 재산은 노동의 결실이다. 재산은 바람직한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선한 것이다. 집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을 허물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며, 그가 부지런히 일해 자신의 집을 짓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집이 다 지어지면, 자신도 남의 집을 허물어뜨리지 않았듯이 자신의 집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허물어지는 일 없이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오사와토미 연설을 통해 루즈벨트는 자본과 노동, 그리고 인권(human rights)과 재산권(property rights) 사이에서 링컨이 “올바른 균형감각”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루즈벨트는 또한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을 강조하면서 “인류의 개선을 위한 모든 현명한 노력에서, 주로 기회 평등을 성취하는 일은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1) 동반성장의 원리: 국가경제의 선순환

국가경제의 선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낙수효과(top-down track)라고 부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는 낙수효과를 기대해 가며 선성장·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고집해 왔다. 처음에 이 전략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1960~70년대에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바와 같다. 저개발 상태에서는 소수의 선도부문을 선별하여 한정된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편법까지 눈감아 주는 것이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고용 확대를 통해 다수 서민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경제는 그런 단계를 지난 지 오래됐고, 낙수효과의 연결고리도 이제는 거의 끊긴 상태다.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흘러가는 길이 막혀 버렸다. 그 원인들 가운데는 대기업들의 납품업체, 하청업체들에 대한 불법·편법 행위, 부당한 갑을관계도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납품업체, 하청업체를 통해 근로자들의 가계를 거쳐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에게까지 응당 흘러들어가야 할 몫이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막혀 버린다. 그런 부당한 행위부터 가장 먼저 일소해 버려야 한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요건이다. 비단 사회정의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제시되었고 이와 함께 재벌개혁이나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과 같은 대책들이 논의되기도 했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것이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식의 방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 60-70년대처럼 정부 관료가 경기장의 전면에 나서서 국민경제의 리더가 되려하면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심판의 역할이 남아있을 뿐이다. 대중 눈감아 주고 넘어가는 영성한 심판이 아니라 엄정한 심판이어야 한다.

아쉽게도 정부는 더 이상 경제민주화 또는 재벌개혁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장래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 주제는 사라질 수 없는 주제다. 큰 흐름으로 볼 때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가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는다면 우리 경제의 산업생태계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다.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가진 부지런한 회사가 자주 등장하여 성공 스토리를 쓰게 된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대기업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역동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시장경제 원리를 파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렇지 않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경제력의 남용이야말로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요소다. 따라서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시장을 바로 세우고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길이다. 골목상권으로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들은 이제 국제무대로 나가주어야 한다. 자기 집 안방에서 구멍가게,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자신의 몸집 크기만큼이나 원대하게 눈을 돌려 국제무대에 나아가 승리하는 것을, 즉 “골목 1등”이 아니라 “세계 1등”을 목표로 삼기 바란다.

둘째로,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분수효과(bottom-up track)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다. 낙수효과와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만으로 한국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극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결과 구조적 장벽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내수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에서는 낙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만능주의를 맹신한 결과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기득권을 고착시키면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는 폐단을 낳았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에서는 분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자칫 개인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며 복지정책을 통한 사후적 분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없지 않았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중 어느 하나의 경로(track)만으로는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여 선순환의 효과를 낳아야 한다. 물론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제도도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는 동반성장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 몇 가지만, 당장 실천하기 쉬운 것들부터 따져보기로 하자. 우선, 초과이익공유(협력이익배분)를 실행해야 한다.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

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해외진출, 그리고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시혜적인 것이 아니다. 보상적인 측면도 있다. 초과이익의 적지 않은 부분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에 연유하기 때문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첫 작품이었는데 세상에 알려짐과 동시에 곳곳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너나 할 것 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에서 나온 비난이었다. 국가의 미래, 중소기업의 생존, 국민의 삶이 흔들리는 줄 알면서도 그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는커녕 꼬투리나 잡는 행동이었다.

이처럼 초과이익공유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협력중소기업들과의 관계를 '협력'관계가 아닌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기업-협력중소기업의 관계도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지만 이것을 일반적인 판매자-구매자 관계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은 판매자-구매자와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상대하는 하나의 큰 공동주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즉, [(협력중소기업 <-> 대기업 <-> 소비자]의 관계가 아닌 [(협력중소기업+대기업) <-> 소비자]의 관계인 것이다.

동종의 TV를 판매하는 삼성과 LG에게 서로 초과이익을 공유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그 대기업과 경쟁하는 업체가 아니다. 협력중소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수족이 되어 한 부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적어도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로서 대기업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위해 일한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반시장적 행위로 보지 않는 것처럼 대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성과를 이룬 중소기업에게 그 기여도에 따라 초과이익을 공유하고 배분하는 것 또한 반시장경제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초과이익 공유제는 경제주체 간의 공정한 이윤분배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시장경제의 병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⁵⁾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이 더 이상 지네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 확대를 금지하는 업종을 적어도 한

5)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는 폐쇄형 분업으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대기업의 일감을 보장받는 대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대기업에 의한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나오는 것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폐쇄적·수직적 하도급 구조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이윤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하도급 구조 자체가 개방적·수평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일감 보장에 기초한 분업관계를 청산하고 대기업과 대등한 교섭력으로 납품단가의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장부를 조사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부터 시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시장의 가격(납품단가) 결정에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자체적 혁신 역량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초과이익공유제는 공정한 이윤 배분 및 축적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조성함으로써 현행 하도급 구조의 중장기적 개선을 앞당기는 과도기적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일정 기간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집중적으로 키워주자는 취지다. 물론 대기업의 참여 금지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조적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결부되어야만 한다.

셋째,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부분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은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 룰 아래에서 대기업으로만 흘러가 고여 있을 돈이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조치들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위주의 신산업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다. 좋은 학생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학자금 융자 혜택을 준다거나 군복무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국가기관, 예를 들면 KOTRA가 대학, 중소기업 등과 협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R&D 자금 배분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

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특히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향상·안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함과 동시에 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계층이 너무 많다. 특히 청년층의 불안정 고용은 잦은 이직을 통해 숙련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인적자본 축적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 관행은 한 나라 안에 두 분류의 국민을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정·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정책과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동정책 사이의 유기적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⁶⁾.

둘째,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2014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고, 금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책정되었다. 솔직히 너무 낮다. 5년 정도의 시한을 정하여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한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의 임금소득 증가는 내수를 자극하여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6) 예컨대, 원사업자의 공정거래 의무를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2·3차 협력업체로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도급법 체계를 개선하고, 초과이익공유(협력이익배분)도 2·3차 협력업체로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단기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는 실증연구 결과가 많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한계 중소기업의 고용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저소득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물론 있다.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은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세제상의 지원책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끝으로, 증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위해서는 물론, 동반성장 시책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정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조세체계, 그리고 현 정부의 간접 증세 기조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 물론 증세를 좋아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도 증세 문제에 대한 언급을 꺼린다. 그러나 침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조세부담률 또는 사회보장세를 합한 국민부담률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간접세 증세와 직접세 증세는 어떻게 결합할지, 보편 증세와 부자 증세의 갈등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세목별 구성과 세율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

이상에서 말한 동반성장의 원리와 시책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단기적으로 경기침체가 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 성장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투자가 부진했다. 대기업은 천문학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나 투자대상이 없고 중소기업은 투자대상은 있으나 돈이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대기업들은 첨단, 핵심기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중기적으로는 연구 및 개발(R&D)의 방향전환, 즉 D(개발: Development)에서 R(연구: Research)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R&D 지출이 절대적으로는 세계 5위이고, GDP 대비로는 1위다. 그러나 대부분이 D지출이고 R지출은 보잘 것 없을 뿐 아니라 R이 독창성 있는 연구라기보다는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임(refinement)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이들도 많다.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지름길은 D에서부터 R, 즉 개발에서부터 연구로 방향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아마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정부가 너무 개입해서도 안 된다. 많은 한국경제 관찰자들은 한국의 R&D가 너무 정부 주도적이라고 비판한다. 현 정부가 자신의 활동 영역을 ‘창조네트워크’의 구성에 국한하여야지 ‘창조경제’를 명목으로 자원배분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시장에 도덕적 해이와 자원배분 왜곡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도 위에서 제안한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통해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에 흘러가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투자-생산-고용-소비증가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나아가 경제 전체의 지속적 성장의 기초가 될 것이다.

동반성장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부

자와 빈자,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양극화된 사회는 경제적 효율은 물론 정치사회적 안정도 확보할 수 없다. 동반성장은 약자들의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사후적 복지수요를 줄이는 사전적 복지제도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진리는 첫째 단계에서 조롱당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심한 반대에 부딪치며, 셋째 단계에서야 비로소 자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동반성장론은 지난 수년간 쇼펜하우어의 첫째와 둘째 단계를 이미 거쳤고, 이제는 셋째 단계로 접근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속에 대기업의 선도적 변화와 중소기업의 자조가 어우러진 삼위일체가 동반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지금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을 피해보려는 속내를 숨김없이 내보이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각 경제주체들이 특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동반성장은 영영 이상으로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동반성장은 20세기와 구분되는 21세기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Zeitgeist)이다⁷⁾. 이것을 이루지 못한 채 지금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서민경제는 파탄 나고, 경제 전체가 붕괴되어 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에 성공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져 한국경제는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다. 나아가 동반성장은 기업과 경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자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근본 가치이다.

3. 장기적 성장전략: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교육투자를 통해 육성한 인적자원이 과거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다면 어떻게 미래의 지속적 발전을 책임질 인재들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을까? 대답은 우수한 교육이다. 고도 성장기에도 그랬지만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도 시대에 맞는 우수한 교육 없이는 달성 불가능하다.

1) 교육혁신

먼저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양극화가 고착되고, 그에 따라 심신의 스트레스가 과중한 우리

7) 20세기 후반 압축성장의 급속한 진행에 뒤이어 민주화 및 시장화의 빠른 전개 속에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의 균형(balance)을 위해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정신이 절실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 독일에게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위해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라는 시대정신이 절실했던 것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세기 중반,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한 독일의 이후 궤적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관류하는 기본 시각은,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 시장경제의 작동을 근본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경쟁질서의 유지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에 걸쳐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해 ‘개인 경제활동의 자유’와 ‘공정성(fairness)’ 사이의 균형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유지해옴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안정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동·서독 통일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치적·경제적 여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더욱 진가를 발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회에서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당당한 자신감을 갖도록 심신을 단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육체적 힘을 키우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내 믿음이다.⁸⁾ 영국의 이튼 칼리지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학생들에게 반소매 상의와 반바지를 입힌 채 차가운 진흙탕에서 레슬링경기를 시킨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묻는 방문객에게 체육교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게 우리가 미래 지도자들을 기르는 방식이다. 19세기 총리들은 대부분 이튼 졸업생들이었다. 하나같이 키 크고 강한 사나이들로, 빅토리아 여왕 재위 기간에 대영제국을 건설한 장본인들이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자 약해 빠진 사람들이 총리가 돼서 대영제국은 패권을 미국에 넘겨줘야 했다.” 그 강사가 농담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의 말 일부는 진심으로 느껴졌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지 않는가?

둘째로, 창의력은 육체적 힘만큼 또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로서, 교육이 새로운 세대에 함양해야 하는 특성이다. 새롭게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일컫는 창의력은 특히 연구개발 부문에 필요한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은 최첨단 투자사업의 설계 및 실행에 필수적이다.

내가 서울대학교 총장 재직 중에 서울대는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법을 지식전달에서 지식창출로 변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학생들이 기존의 사고방식에 도전하고 이를 향상하며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문 과정을 재설계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포함하는 기초과학 및 교양교육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인종 및 민족·성과 성차별·탈식민주의 등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핵심과목을 개설했다.

또한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 수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학생 대 교수 비율을 낮췄다. 국가경제와 마찬가지로, 지난날 한국의 교육은 성장에 치중했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는 200개의 4년제 대학과 160개의 2년제 대학이 있으며, 대학생은 전체 인구의 4% 전후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 더 이상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산업처럼 되어버렸다. 교육에 필요한 개혁 중 하나는 바로 대다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숫자와 규모를 줄이는 일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한층 내실 있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대학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 사고에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필수적이다. 나는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신입생의 1/4~1/3을 전국에서 골고루 선발함으로써 전체 학생이 모든 지역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학생들과 교수진 모두에게 보다 광범위한 간접경험을 가능케 한다. 개인들의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을 지식의 전달자로부터 지식의 창조자로 변화시키는 것은 색다르고 새로운 아이디어이며, 이것을 자극하는 것이 폭넓은 간접경험이다. 대학이 지식의 창조자로 기능할 때 비로소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8) 이 부분은 존 로크가 저술한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1690)을 참조했다. 이 책은 박혜원, 「교육론」, 비봉출판사, 2011로 번역되었다.

인재를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우수한 교육이란 또 낯선 상황, 나아가 위기에 적응하는 능력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일찍부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감과 융통성을 겸비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자신감과 융통성이야말로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이들이 효율적으로 성공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일은 곧 훌륭한 사람을 기르는 일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묻는 일과 유리된 지식은 한번 써먹고 마는 소모품과 다를 바 없다. 한 개인이 아무리 잘 나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필경 남에게 질시와 배척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며, 결코 어디에서도 존중받는 리더가 될 수 없다.

2) 사회혁신

우리 사회가 경기침체와 양극화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성장잠재력도 떨어진 근저에는 단순히 경제성장 전략의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보다 근원적인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질서 자체가 서서히 붕괴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맨 밑바닥에 불의와 부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꼈던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정부, 상식이 먹혀들지 않는 사회, 그리고 그 밑바닥에 끝 간 데 없이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부패구조 때문이었다.

부정과 부패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거대한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다. 이 구조는 “더불어 살기” 보다는 “끼리끼리 살기”를 추구하고, 힘없는 자를 위해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힘 있는 자를 위해 불의를 눈감아 주고 있다. 한국경제가 거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공감대였던 “보다 나은 미래, 더 잘사는 사회”는 사라지고, “그들만의 잔치, 비상구가 없는 사회”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할아버지·할머니나 부모가 부자인 사람”은 맞선 시장에서도 환영받지만, 가진 것이 개인의 능력 하나 밖에 없는 사람은 그 능력을 펼칠 기회도 점점 줄어드는 사회가 되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있다. 결혼도, 취업도 할 수 없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너무도 일찍 온 몸으로 깨닫고 있다. 그들이 좌절하고 병들어갈 때, 우리 사회의 미래도 병들어가고 있다. “재능이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라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는가?” 또는 “누구와 결혼했는가?”가 더 중요한 사회는 신분사회다. 누구든 재능과 도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꿈을 이루는 사회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사회는 민주주의에도 역행한다. 재능이 아니라 핏줄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신분사회, 귀족사회를 무너뜨린 것이 다른 아닌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었는가.

부정과 부패의 구조는 우리 사회의 도처에 널려 있다. 돈 주는 기업인, 돈 받는 공무원, 이권을 추구하는 정치, 기득권에 안주하는 언론계와 학계, 정의에 눈 감은 사법부, 도그마에 빠진 종교계 등이 우리 사회의 솔직한 자화상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부정과 부패의 구조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 부정부패의 구조 속에서 가진 것이라곤 개인의 능력 하나 밖

에 없는 사람은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적어도 정당한 방법으로는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 경제의 각 구성원들이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하면 가장 먼저 정치권을 떠올린다. 그런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부패의 문제에 과연 정치권이 가장 선두에 있는 지는 의문이다. 정치권을 빼면 우리 사회의 여타 부문은 문제가 정말 없는가? 나는 오히려 정치권의 부패를 거론하는 것이 다른 부문의 부패를 은폐하는 수단,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거나 않은지 염려스럽다.

교육계는 깨끗한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들이 모여 있는 대학들은 어떤가? 일부 사학재단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장수하고 있다. 사학재단에 조금이라도 개혁의 칼끝을 넣으려고 했던 정권은 모두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가장 자유스럽고 민주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은 가장 권위적이며 위선적이기까지 하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법조계는 어떤가? 몇몇 대형 로펌들은 이미 재벌 못지않은 권력과 부를 축적한 지 오래다. 이들은 재벌과 관료들, 학자, 정치인들과의 먹이사슬을 구축하여 블랙홀처럼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는 생산적 경제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왜 고위 관료들이 퇴직하면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가겠나? 어떻게 판사와 검사들이 퇴직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몇 십 억 원의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나?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산하단체에 이권을 챙겨 주고, 퇴직하면 그것을 향유하는 구조가 이제는 너무나 만연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좋을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세월호 사태는 우연히도 그 빙산의 일각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작년 여름, 우리나라를 방문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셨다. 그 분은 화해와 평화가 “정의의 결과”임을 분명히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다.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부정과 부패의 구조가 일소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성인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며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경제학이 말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나는 다만 개인의 욕심이 사회와 충돌할 때,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고 엄정한 규칙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규칙은 한번 만들어지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사람들이 그 규칙을 따르게 된다. 빨간 불이 들어오면 예외 없이 차를 멈추고, 파란 불이 들어오면 예외 없이 차를 달려야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누군 지키고 누군 안 지켜도 된다면 도시는 엉망이 되고 도로는 위험해진다. 모든 자동차들에게 그리고 모든 보행자들에게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처벌을 내리니 교통사고가 매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부정부패를 다루는 규칙도 교통규칙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4. 21세기에도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불과 수 백 년 전, 세상은 산업혁명을 통해 급변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화나 IT 혁명 등 여러 변화로 세상은 더욱 좁아졌고 가속적으로 바뀌었다. 그런 가운데, 개별 국가가 각기 직면한 상황도 크게 바뀌었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각국의 문제 해법과 정책적 지향은 달라진다. 변화를 적시에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국가는 번성한다. 그렇지 못한 국가는 실패한다.

최근 미국 MIT의 애쓰모글루(D. Acemoglu) 교수와 하버드의 로빈슨(J. Robinson)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라는 저서(Crown Business, New York, 2012)에서 ‘포용적 정치제도(inclusive political institutions)와 포용적 경제제도(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가 상승작용해야만 번영이 지속가능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⁹⁾ 이들은, 한 사회의 경제제도가 포용적이 아니라 수탈적(extractive)이라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포용적 경제제도가 들어섰다고 해서 항상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경제제도가 포용적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정치제도가 포용적인지 여부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자신들의 분석 프레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험을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포함시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¹⁰⁾.

“...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치제도가 수탈적인데도 경제제도가 포용적 양상을 띠어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치제도가 더 수탈적으로 바뀌면 성장이 멈추게 될 위험이 언제나 존재한다. 정치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일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일, 자신이 취하는 부정 이득의 몫(pie)을 키우는 일,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몫을 훔치거나 약탈하는 일이 자신에게 남는 장사라는 점을 궁극적으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탈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정치제도로 바뀌지 않는 한, 수탈적 정치제도에서의 권력 분배 상태와 권력 행사 권한은 결국 경제적 번영의 토대 자체를 훼손시키는 법이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의 시각은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은 양질의 경제제도와 정책만으로 확보

9)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에 따르면, 포용적 경제제도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고 사람들의 직업 선택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확고한 사유재산(secure private property), 공정한 법률시스템(unbiased system of law), 교환 및 계약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Acemoglu and Robinson, 2012, pp.74-75). 한편, 포용적 정치제도는 “충분히 중앙집권적이고 다원적인(sufficiently centralized and pluralistic) 정치제도”를 가리킨다(Acemoglu and Robinson, 2012, p.81).

10) Acemoglu and Robinson(2012), p.95의 마지막 문단을 인용했다.

되는 것은 아니며, 양질의 정치사회적 토양이 받쳐주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의 분석은 내가 위에서 강조한 한국경제의 성장전략 즉 단기적인 동반성장과, 장기적인 교육혁신 및 사회혁신과도 일맥상통한다.

사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온 나라가 폐허였던 독일은 그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시장경제모델을 정치 어젠더로 확립할 수 있었던 덕에 지속적인 변영이 가능했다. 이는, 독일 사회가 일찍이 “사회적 몰락(social ruins)을 근간으로는 경제적 낙원(economic paradise)을 세울 수 없고”, “경제적 몰락(economic ruins)을 근간으로는 사회적 낙원(social paradise)을 세울 수 없음”을 깨달았던 덕분이다.¹¹⁾

급변하는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나라는 발흥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퇴하는 것이 세계사의 일반적 법칙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변영과 쇠락의 기로에 와 있다. 21세기에도 한국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바로 오늘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있다.

11) Yves Leterme(2014)에서 인용한 표현이다.